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7. 15.(금)
담당 부서	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	책임자	과 장 정선인 (02-2100-2610)
		담당자	서기관 서지은 (02-2100-2611)

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제도 관련 빚투 조장 우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
- 문화일보 7월 15일자 보도 관련 -

1. 기사내용

- 문화일보는 7.15일 「“이자 잘갚은 난 바보?”... ‘빚탕감 대책’ 형평성 논란」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. 청년층의 채무가 최근 빚투로 촉발됐다는 인식이 짙은 가운데 이런 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 점이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다.”라고 보도했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서 발표한 「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」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,
 - 이들이 이자 상환부담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,
 -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부담을 조정해주는 것으로,

- 신복위 심사과정에서 채무액, 소득·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하여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등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앞으로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,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·운영하여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고,
 -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.

